

〈특집〉

『서울대학교 法學』의 위상과 역할

崔大權^{*}

1. 머리말

이 발표문의 제목은 그 자체가 글의 목표, 내용 및 방향 등에 대한 지시(dictation)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대학교 法學』은 무엇이며 그 위상은 어떠한고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제목이 던지는 문제들은 사실판단의 문제와 당위적 처방의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내가 판단하는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학교소식지나 종합지(예컨대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쓴 논문, 시나 소설을 싣고 학교소식도 전하는 그러한 의미의 종합지)와 같은 것이 아니며, 서울대 교수들의 법학논문만을 싣는 논문집도 아니고, 혹시 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권위적인 법학학술논문집인 것이다. 이러한 진술(statement)은 사실의 서술이지만 또한 이러한 진술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장차는 어떠한하여야 하느냐 하는 평가적·당위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위상”이란 무엇인가? 위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선 떠오르는 뜻은 法學지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이미지(image)가 아닐까 생각하였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았더니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라는 뜻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한 뜻이라면 그것은 법학 저술에서 많이 쓰이는 “지위”라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치나 지위” 및 “국회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치 내지 지위”의 용어례에 비추어 보면 법학지의 기능 내지 역할을 중심으로하는 위치나 지위와 상하, 동서남북 또는 좌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의 어느 위치나 지위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나 역할을 중심으로 위상을 논한다면 그것은 위 제목의 “역할”과 중복되어 위 제목은 “法學지의 역할과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제목을 法學지의 상중하의 위치와 그리고 그 역할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상중하의 어느 위치 선정이든 역할이든 그것은 사실적 서술이나 판단과 함께 당위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역할”에 관한 논의는 그러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역할”은 사회과학적으로 “기대역할”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서울대학교 法學』의 위상과 역할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다만 논의의 편의상 法學지의 역할에 관한 분석을 먼저 행하고 이어서 法學지의 위상(위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나는 서울대학교 法學지와 남다른 인연과 함께한 경험 및 애증을 가지고 관찰과 기여를 해왔다. 나는 1963년 서울대학교 조교가 되어 法學지 게재 논문의 교정을 보는 작업으로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法學지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법학자로서의 출발이라고 부를만한 연구결과(판례연구)를 조교로 있으면서 法學지에 실을 수 있었던 기회랄까 행운도 1964년에 처음으로 가졌었다. 그 이후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의 국내 공백기간을 제외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로서의 취임 이전이나 이후의 길다면 긴 기간 동안 내가 행한 법학연구는 거의 전부 法學지 게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학연구논문의 法學지 게재는 2002년의 정년퇴임 이후인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법학자로서의 성장과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法學지와 함께하여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나는 1970년대 후반기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법학연구소 연구부장(법학연구소장 배재식 교수)으로서 법학 학술회의의 조직·개최와 함께 법학지 발간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말에는 법학연구소장으로서 또한 법학 학술회의의 조직·개최와 함께 法學지 발간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한 만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말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님은 물론이다. 학자로서의 훈련이 다 그러하듯이 자기가 목격하거나 체험한 것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

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은 예컨대 오로지 문헌연구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심층적인 그리고 균형 갖춘 분석을 가능케 한다고 믿는다. 말할 것도 없이 아래의 글은 서울대학교 法學지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에 바탕을 두되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객관적 시각에서 그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 관찰하고 체계화한 것을 보여주려고 작성한 것이다.

2. 법학논문집의 역할

『서울대학교 法學』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법학학술논문집이다. 그러한 만큼 우리의 논의는 법학논문집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냐의 분석에 우선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학술논문집은 개념상 법학논문을 작성하는 법학자를 관련시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법학논문집은 한 법학자의 논문집일 수도 있고 여러 법학자의 논문집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서울대학교의 法學』지는 정기적으로 여러 법학자들의 법학논문들을 모아 간행하는 법학학술논문집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는 여러 법학자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논문이란 법학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론상 법학자는 논문을 쓰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예컨대 법적 결정권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제공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오늘날에 이르러 법학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상적 방법으로 논문작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법학자와 논문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법학자와 법학교수는 결코 동의어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법학자와 법학교수를 거의 동일시하여 논의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예컨대 교수가 아닌, 연구소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의 법학자도 있지만 오늘날 법학자의 활동무대는 대부분이 대학인 까닭에 편의상 대학의 법학교수 = 법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논의를 전개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법학교수 = 법학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법학교수 = 법학자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두 개의 역할 즉

미래의 법률가양성(교육)과 그리고 법학논문 작성을 통하여 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법이념·법이론 제공(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이라 하면 소위 법조 3륜 즉 판사·검사·변호사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폐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미에서는 법학교수 = 법학자를 academic lawyer라고 하면서 법률가집단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법학자 = 법학교수 그룹 및 그 역할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 법학자 = 법학교수 및 그들의 역할을 제외하고 한 나라의 법제도의 운영을 생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법학교수 = 법학자의 법이념·법이론 제공은 그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 결과물인 논문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구 잘하는 법학교수가 반드시 훌륭한 법학교육자인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연구가 없는 법학교수가 훌륭한 법학교육자일 수는 없다고 믿는다. 특히 근래에 이르러 법학교수의 연구활동 및 논문발표는 채용·승진 등에 걸쳐 법학교수의 생명이라고 하리만큼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 및 논문발표의 중심에 논문집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교수 = 법학자의 연구활동 결과인 논문의 발표는 공인된 논문집 게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여부에 의하여 공인된 논문집임을 증명하는데, 이러한 등재지라고하여 그것이 반드시 권위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오늘날 학진 등재지¹⁾일 뿐만 아니라 그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도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제도 탄생 훨씬 이전에 이미 확립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지임은 이미 지적인 바이다.

권위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다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법학논문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내용(법이론)의 質 즉 法의 淵源으로서의 권위(authority)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영미법계 법발달에서는 판사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데 비해 로마법 이래 대륙법계의 법발달에서는 법학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져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²⁾ 그리하여 영미법이 원래 판례법으로 형성되어온 법인만큼, 영미법이 판례법을 제정법·관습법과 함께 法源으로 취급하는 것

1) 교정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행정적으로 ‘등재후보지’이나 대단히 가까운 시점에 등재지가 될 것임에 틀림없어 그냥 ‘등재지’라고 표기하였다.

2) Jho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2nd e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5), 34-38면 및 56-60면 참조.

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법학자의 법이론·학설을 2차적(secondary)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법원으로 취급하고 있음³⁾은 흥미롭다. 그런데 대륙법에서는 판례도 법이론·학설도 법원으로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판례라고 하지 판례법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륙법에서도 판례가 사실상의 법원으로서 판결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법의 흠결의 경우에 더구나 판례도 없는 경우에 법학자의 이론이나 학설이 사실상의 법원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판결문에 脚註를 단다든지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몹시 꺼리고 있을 뿐이다. 어느 사안에서 해당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條理에 의거하여 판결하지 않을 수 없다(민법 제1조 참조). 이같이 조리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경우에 법학자의 이론·학설이 조리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정된다. 즉 법학자의 이론·학설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강력한 권유적 효력(persuasive power)을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법학자의 법이론·학설은 제2차적인 사실상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중요한 작용 즉 제2차적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학자의 법이론·학설을 실어 이(법)를 발견해내는 자료(sources)가 되는 것이 논문집이다. 즉 법원으로서의 제정법을 찾아내는 자료가 되는 것이 법전이라면 법학자의 법이론·학설을 발견해내는 자료가 논문집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판사가 판결로 말을 한다면 법학자는 논문집에 발표된 논문으로 말(법이론·학설 등을 통하여 법)을 한다. 법학자는 자기 말을 저서를 통하여 하기도 하지만 학생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고 주로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가 되고

³⁾ E. Allan Farnsworth,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3rd. ed., (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1996), 83-89면; 예컨대 영국에서 Coke의 *Institutes of the Laws of England*(1628)라든지 Blackstone의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1765) 등의 고전적인 권위적 저서는 법원으로 취급되지만 오늘날의 법학자의 저서는 권유적인 효력을 가지는 2차적인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David M. Walker, *The Oxford Companion to Law*의 Sources of Law란: Keith Eddey, *The English Legal system*, 4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87), 135-137면; Ronald Walker and Richard Ward, *English Legal System*, 7th ed., (London : Butterworths, 1994), 86-91면 등 참조.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법학자인 법학교수의 업적 평가도 주로 그가 집필한 논문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높은 평가를 받는 법학논문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2차적 법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는 좋은 법학논문이란 그 주장의 내용이나 이를 증명해내는 방법론 등에서 창의적·독창적인 논문을 주로 일컫는다. 개혁입법과 같이 법이 사회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일어나지만 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일어나거나 그밖에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내지 간극 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한 괴리 내지 간극을 매우는 창의적인 주장(해석론·입법론을 포함하는 법이론)이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필요 내지 요청을 충족하는 법학논문이 창의적인 논문이라 할 것이며 논문집 게재를 통하여 제2차적인 법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권위적 법학논문집으로서의 위상

“위상”을 논의할 때 권위적 법학논문집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위상도 말할 수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이다. 다만 이곳에서는 주로 “위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위상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보자. 이러한 의미의 위상을 논의할 때 5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 法學을 되돌아보면 서울대학교 法學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논문집으로서의 권위를 지니는 법학학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초기에는 法政, 法曹, 司法行政, 考試界와 같은 실무지나 수험지가 있었을 뿐 서울대학교 法學 이외의 법학학술지는 없었다. 대체로 70년대부터 여러 법학회의 학회지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근래에는 여러 대학에서 법학지가 출간되고 있지만 전통이나 수록하고 있는 논문의 질에서 서울대학교 法學을 추월하는 권위를 지니는 법학학술논문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다고 믿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빠른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과정에서 法學지는 우리나라 사회가 제기하는 중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를 지도하는 법원리나 법규칙을 제시하는 등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法學지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학술논문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가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절대적 평가에서 반드시 그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믿는다. 더구나 세계화 추세에 있는 오늘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믿는다. 요즘 유행하는 비교론, 즉 서열 세계 몇 번째라는 도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법학학술지로서 세계 몇 번째나 될까 하는 질문은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게재된 논문의 인용회수 등의 지표를 동원하여 서열을 만들어 볼 수 있음직하긴 하지만 필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가령 주관적인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열을 따지는 것이 민망스러운 것이라 짐작한다. 법학분야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서양 선진국의 문헌을 인용하지만 서양 문헌에서 우리가 쓴 논문을 인용한 것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논문집의 서열이란 게재되는 논문들의 질이 좌우할 것인데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은 한편으로는 한국 법학의 독자성에 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한국 법학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영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우리의 법학 논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용어에 관계없이 독자의 법학이 있느냐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학설이나 이론·판례·제도 등에 반드시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우리 자체의 법률자료 즉 우리의 학설이나 이론·판례·제도 등에 근거하여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방향과 방법 및 원칙과 규칙을 제시해 낼 수 있는 능력 내지 상태를 독자성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보면 인류보편의 선례나 고전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전통과 법률자료에 근거하여 법학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당한 이론이나 학설을 창안하여 가려고 하지 아니 하고 외국의 제도나 학설·판례부터 찾는 습관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독자성을 가진 법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계 정상급의 법학학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이러한 의미의 독자성을 가지는 법학, 그리고 법학지를 가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법학을 위한 법학방법론의 논의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리가 믿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영어로 행하는 강의 장려정책 뿐만 아니라 영어로 작성되는 영어 법학논문 장려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영어 법학논문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영어를 손봐주는 영어교정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지금 현재 한국어 논문의 경우에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영문요약의 경우에 논문전체의 번역은 아닐지라도 본문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 만한(substantial) 영문요약을 동반 게재케 함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서양에서의 라틴어쯤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한자를 법학논문작성 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치 아니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10년 전 20년 전 수준까지의 한자사용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법률용어의 거의 전부가 한자어라는 사실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본말을 몰라도 한자로 표기된 법률개념을 통하여 일본 법률문헌의 제목은 물론 내용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한자어 법률용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학논문 등 법률문헌에 대한 동아시아 학자들의 접근성을 그만큼은 높여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자를 알면 더 설명이 필요치 아니한 法源과 法院, 私法과 司法 등의 차이와 같은 문제를 젊은 세대들에게 새삼스럽게 해설해 줄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지난 시절 오랫동안 대학차원의 출판자금지원에 따르는 규제 때문에 法學지의 집필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서울대교수(및 조교)에 한정하고 있었으나,⁴⁾ 法學지를 좀 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법학학술지로 만들기 위하여는 집필자 자격이 타 대학 교수나 기타 외부 인사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은 학진등재지 요건의 하나로도 완전 개방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학진등재지 요건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법학학술지를 만들기 위하여 게재논문의 등재여부의 심사를 실질적으로 더욱 엄하게 하여 法學지의 질을 좀 더 향상

4) 적어도 필자가 법학연구소장을 하던 2000년 무렵까지는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예컨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발표케 하고 발표논문을 신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여 왔었다.

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대학원생들의 『法學研究』의 발간은 잘못된 법학교육 정책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원교육은 원래 장차의 법학자 내지 법학교수의 교육인데, 이들에 대한 기성의 교수급 및 그 이상의 자질의 법학자양성이 그 목표라면 서울대학교 法學지에 실릴만한 수준의 논문작성훈련을 시켜, 실제로 그러한 수준의 논문을 썼다면, 예컨대 다른 학문분야에서 하듯이 지도교수와 공저(제1저자, 제2저자 등)로 법학지에 싣게 하여야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들 수준의 글을 모아 그들만의 놀이감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학원 교육목표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논문을 안이하게 쓰는 버릇을 길러 줄런지 모른다. 학부생들을 위한 Fides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들이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공채에 지원하는 경우에 『法學研究』에 실린 글은 교수로서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제대로 된 논문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서울대학교 法學지에도 물론 서평과 판례평석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서평이나 판례평석은 대체로 소개나 칭찬으로 그치고 있다. 앞으로의 서평이나 판례평석은 소개나 칭찬에 그칠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그 자체 하나의 논문이 될만한 내용의 평이나 연구(판례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입법(사)례에 대하여도 판례평석에 해당하는 입법평석이랄까 입법연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판례에 대한 판례연구가 가능하다면 입법(사)에 대하여 여러 시각, 특히 입법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입법연구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法學지의 중요 항목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기회에 法學지 원고의 원고료 문제를 회고와 전망의 차원에서 한 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法學지의 경우에 내가 법학연구소 법학부장(소장: 배재식 교수)을 하던 무렵인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본부 차원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法學지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가 지급되었는데 어느 날 출간비의 지원은 계속되나 원고료의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본부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대학 전체차원의 결정이었다. 당시 연구비가 이공계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서 대학이 지원하는 학술지의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

러나 법학을 위시하여 인문사회계에서는 학술연구비지급이 드물던 시절이라 法學지 발간을 담당하던 법학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제법 심각하였다. 그리하여 인문사회계의 다른 연구소 등과 연합전선을 폈었는지의 기억은 확실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법학연구소에서는 원고료 계속지급의 당위성 주장을 펴서 그 지속을 탄원하였던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다. 원고료 계속지급의 당위성은 학술연구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있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계속지급의 당위성을 옹호하였었다. 즉 당시에는 더욱이 도서관에는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가 심히 부족하였고 또 복사비 지원도 없었다. 그래서 “연구논문작성을 위해서는 순전히 개인 부담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도서 등을 구입하여야 하고 복사비 부담 등도 상당하였던 까닭에 원고료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자료구입비, 복사비 등의 필요경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거를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둔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었다. 그러한 때에 배재식 교수님이 아산재단으로부터 기금(3억원)을 마련하여 이를 은행에 적립한 수익금으로 원고료 지급을 지속시킬 수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 다만 그동안 기금의 추가증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가상승율, 이자수익의 급감 등의 요인으로 위 기금의 수익은 오히려 상당히 축소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근래에 이르러 법학분야에서도 학술연구비지원이 일반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전부터 그렇게 하여 왔던 것처럼 연구비지원을 받은 법학학술논문의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오히려 게재료를 납부케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법학연구를 연구비지원이 있을 때에만 행하고 연구비지원이 없으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연구비지원과 함께하는 연구는 연구비신청 때의 경쟁이나 선발을 의식하고 응모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학자가 학자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행하는 연구가 아닐 수도 있다. 용역에 의한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연구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학자로서의 학문적 욕구와 필요성에 따라 연구하는 일도 또 본교 교수 이외의 법학자의 우수논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 바람직하거나 더 우수한 연구에 이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교수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박사과정중인 학생들의

우수학술논문 게재를 위한 제1저자·제2저자·제3저자 등의 장치를 통한 서울대학교 法學지 투고자격의 개방을 위에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논문들이 반드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비의 지원없이 작성된 法學지 게재논문에 대하여는, 그 논문이 현직 서울대 교수가 작성한 논문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개진하였던 원고료 지급의 이론적 근거는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각종의 발전기금 등으로부터 위의 法學지 원고료지급을 위한 기금은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학문으로서의 법학 학술연구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法學지의 세계 차원의 질적 위상 향상을 위한 장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法學지의 역사와 임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6·25전쟁 및 196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100불도 안되던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산업화·민주화를 비롯하여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에는 우리나라 법학교육·법조인 양성 체계의 대변혁을 동반하는 로스쿨체제의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논문집인 만큼, 우리나라 사회 변화가 어떻게 그것에 반영되어 왔느냐, 다른 한편 법원칙과 규칙의 규명을 통하여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리드하여 왔느냐의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반세기의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성장을 관찰·분석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글 자체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기타 여건 사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르지 못하였고 오로지 개인적 체험이나 기억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변화가,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法學지에 반영되어 있으며 法學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나 우리나라 사회변화에 기여하였는지,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법학 자체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또는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자체로 하나의 학위논문 주제가 되리 만큼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이 法學지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야별로 오후 분과에

서 분석·설명되고 있다.

시야를 미시적으로 조정하면,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이를 통하여 성장한 한 법 학자들의 학문적 성장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도 된다고 생각된다. 나 자신은 주관적으로도 서울대학교 法學지를 최고수준의 법학학술지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法學지 게재를 법학자로서의 최고 영예로 생각하여 나의 주요저작물은 거의 전부 法學지 게재를 통하여 세상에 내 놓았음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다. 그리 하여 내가 조교신분으로 1964년의 法學(제6권 제2호)지에 내 연구물을 실은 이래 교수와 그리고 명예교수의 신분을 가지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法學 제49권 제4호, 2008) 줄곧 法學지에 나의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 왔다. 그러므로 法學지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교수들의 법학자로서의 성장의 발판이자 그 성장과정을 바라볼 수 있는 효과적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法學지의 책, 크기, 모양, 색깔, 포맷 등 체제의 측면에서 일련의 역사가 거기에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대 후반에 법학연구소 연구부장으로 소장인 배재식 교수님에게 서울대학교 색깔(고운 권색과 금색, blue and gold)을 法學지의 표지색깔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그렇게 한 적(아마도 法學 제21권 제1호, 1980. 12)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물은 실망스러웠다. 그것은 이전의 빛바랜듯한 하늘색의 재현이었다. 法學지 책을 만들었던 서울대학교 출판부가 지녔던 당시의 인쇄기술로는 원하는 색깔(blue and gold)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색깔 실험은 한번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法學지는 혹시 우리나라 출판기술발달사를 보여주는 표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책 색깔도 회색으로부터 누런 갈색, 청색, 녹색, 그리고 오늘의 색깔도, 책 사이즈도 소위 국판에서 46배판으로, 종이의 질도, 디자인도, 발행부수, 발행연도 표기, 책 페이지 상단의 논문명, 호수 및 출간연도, 각주의 인용방법 등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발전과 변화를 거쳐 오늘의 참신한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한 때에는 책 뒷면 안 쪽을 보지 아니하면 몇 년도에 출판된 것인지 알기 힘들었던 적도 많았고, 논문 복사도 많이 하는 시대인데 논문만 복사한 복사물만

가지고는 그 논문의 출판년도, 호수 등을 알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또 외국 문헌의 인용방법도, 예컨대 독일책은 독일의 인용방법(예컨대 S. 14), 미국책은 미국식 인용방법(p. 14), 우리 것은 우리식(면, 쪽 등), 일본 것은 일본식(頁)으로 제 각각으로 인용표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 문헌 인용방법도 저자마다 달랐던 시절을 거쳤다. 어느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나라 출판계 일반의 발전단계의 반영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1970년대 말의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시절부터 1990년 말 법학연구소 소장 시절까지 보직자로서 그리고 보직이 없었던 때에는 法學지에 유달리 관심많은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교정보는 법학연구소 조교를 붙들고 지금 현재의 法學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체제 및 인용방법 등을 확립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法學지의 지금 현재의 체제(예컨대 페이지 상단의 논문제목, 권수 표기, 출간년도, 쪽수) 및 인용방법 등의 통일(인용된 책의 출판국가에 상관없이 서양서적은 이태릭, 한국서적은 볼트체, 논문제목의 인용부호 사용, 면이나 쪽 사용, 위에 또는 뒤에 인용하는 것이거나 상게 또는 후게 등) 등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러한 노력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대체로 지금 현재의 法學지 체제가 내가 법학연구소 소장이던 무렵에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헌 인용시의 서적의 볼트체표기는 눈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내가 꽤나 공을 들여 관철시켰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 法學지 편집위원은 서울대 법대교수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내가 법학연구소 소장으로 있을 당시 처음으로(제42권 제1호, 2001) 이를 외부인사에게도 개방하기로 하여 법대교수 이외에도 당시 우창록 변호사, 김성태 교수 및 이인복 판사를 편집위원으로 영입하였었다. 法學지 편집위원의 외부인사 영입은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法學지 발행부수를 년 4회로 늘린 공로는 단연 년 4회 발간목표를 세우고 이를 밀어붙인 법학연구소 소장인 배재식 교수님에게 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년 2회 발간이 고작이었다. 당시에도 년 4회 발간하는 law review 등 외국의 법학잡지와 우리 法學지를 교환하고 있었는데 특히 새로 교환상대지 수를 늘기 위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권 보내면서 네권을 보내라고 하기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까다롭게 굴거나 언짢게 언급하는 나라 사람들도 있었고(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대표

적 법학지로서의 위상도 고려하여 그렇게 결단한 것이다. 당시에는 법학연구소가 직접 외국 저널과 접촉하여 직접 교환업무를 담당하였었다. 물론 오늘날에는 중앙도서관이 법학지의 교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무튼 法學지의 논문 수용(게재)능력이 이로 인하여 배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이 法學지의 게재능력이 년 4회 발간으로 늘었다고 하여 곧 바로 게재할 논문들이 거기에 맞추어 충분한 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2호, 2·3호 혹은 3·4호 등의 합병호가 나오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學지의 발간은 년 2회의 발간으로 결코 돌아가지는 아니하였다. 아무튼 교수들의 논문실적 쌓기의 실정 때문에 지면이 모자라거나 책 두께가 대단히 두꺼워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法學지 겉 표지 디자인(노란 색과 상단의 회색, 자색의 띠, 그리고 게재논문 등의 표기)은 내가 법학연구소 소장이었던 시절 간행부장이었던 정종섭 교수의 아이디어 및 강력한 권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대학교 法學지는, 지난 반세기의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변화의 굵이굵이마다 한편으로는 역사와 사회변화,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수준을 반영하며 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 크게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변화를 그리고 적게는 우리나라 법학을 그 최첨단에 서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학자의 역할과 법학자의 연구결과로 창안하여 수립·개발한 법이론 및 학설이 우리나라 법질서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서울대학교 法學지 이외의 어떠한 법학논문집이 따로 있어 이에 버금가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같이 지난 반세기의 역사와 사회변화가 法學지와 가진 관계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사회변화의 전개는 法學지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단순히 이를 수록하고 반영해 나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게재논문을 통하여 그리고 논문지로서의 체제나 형식을 통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이를 이끌어 나가야할 임무를 지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첨단에 선 법학학술논문집으로서의 그 위상을 지키지 위하여서라도 수행하여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法學지는 그 첨단에 서서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 법학 자체의 발전과 그 전

개 과정을 고스란히 수록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언명은 새로 출발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앞날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며 또 커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차 법학전문대학원인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단순한 법률실무가 양성기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예컨대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입헌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사회를 이끌어갈 academic lawyer를 양성·배출하여야 할 운명이라고 규정지어야 마땅한 사명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Who else can do it? 이러한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 法學지와 함께 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academic lawyer의 양성·배출의 사명을 앞장서서 수행하여 왔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역할을 앞으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떠맡게 되어있는 것이다. 사실 새로 생긴 로스쿨의 역할이 실무가양성의 역할이 그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로스쿨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대하여는 특히 그렇게 말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설립의 취지나 실제의 운영상 로스쿨이 법실무자 양성기능의 수행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기능의 수행에 그치게 된다면 한국법의 발전과 한국법학의 미래는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장차 외국의 법이론·학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부르기 어렵게 구지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학부레벨의 체제가 대학원레벨의 법학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래에 고교졸업생을 바로 입학시키던 체제에서 기왕에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입학시켜 그러한 지적 수준의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법학교육을 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로스쿨의 역사⁵⁾를 살펴보아도 예컨대 Harvard Law School이 원래는 Harvard 대학의 학부레벨의 법학교육기관, 그것도 처음에는 1년과정의 law school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2년과정으로, 그리고 대학학부 2

5) 미국 로스쿨의 역사에 관하여, 최대권,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지적 흐름에 관한 연구: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미국학연수소 편,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89-329면 참조.

년만 이수하면 입학시키던 law school이었다가 점차 입학자격을 업그레이드시켜 최종적으로 학부4년졸업생을 입학시키는 대학원레벨의 law school로 발전한 것이다. 知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mature) 사람에게 법률가로서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법학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게 발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은 계속하여 law school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law school들(예컨대 Harvard, Yale, UC Berkeley, Michigan 등)이 실무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가는 유수의 법학자들도 양성·배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Harvard Law School을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냥 하바드 법과대학이지 굳이 하바드 법학전문대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법학자를 배제하고 미국법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미국 법학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場이 law review라 불리는 그들의 법학지인 것이다.

5.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반 세기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는 산업화·도시화·민주화 등 대단히 급속하고도 변혁적인 사회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 로스쿨의 도입, 법학을 포함하는 학문과 예술의 발달 및 학술지 발간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아우른다. 이러한 사회변화가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法學학술지에 여러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法學지에 실린 법학논문들을 통하여, 그리고 법학자 = 법학교수들이 거기서 전개한 법이론·학설을 통하여 법의 이념이나 법 원리·원칙을 밝힘으로써 입법으로나 사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변화를 이끌며 혹은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나아가 法學지는 그 첨단에서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과정과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말할 것도 없이, 法學지의 이러한 역할이, 그리고 法學지에 투영된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법학의 역할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 출발하는 로스쿨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法學지가, 우리나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도 단지 알려져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세계 유수의 권위지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法學지가 이끄는 우리나라 법학의 세계적 수준 달성에 달려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헌법 전문)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법학의 학문적 창의력과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나라 법학자 = 법학교수의 학문적인 지도적·창의적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첨단이 法學지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리라 믿는다.